

〈제 718호〉

#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광주신세계

#### ◆ '사랑의 S-BOX 후원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은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사랑의 S-BOX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광주신세계 임직원들과 함께 서구청 복지정책과 관계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와 관내 5개 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가 참석했다.

광주신세계의 '사랑의 S-BOX'는 2017년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지역 내 결손아동 가정 등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광주시 교육청과 서구청, 서구 관내 5개 복지관(금호, 쌍촌, 무진, 시영, 농성)과 연계해 간편식, 간식류, 생필품 등 맞춤형 패키지를 구성해 결손아동에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건강을 챙기고 있다.

광주신세계 사회공헌 관계자는 "현지법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생문화를 열어가는 기업으로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은행

#### ◆ 광주은행 노동조합, 제47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광주은행 노동조합이 지난 18일 광주은행 본점 KJ상생마루에서 제47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및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제20대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된 박만 위원장을 비롯해 이성욱 제19대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윤종해 의장, 전국금융

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 등이 참석해 광주은행 노동조합의 새로운 3년을 축하했다.

박만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진행하며 "조합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은행의 구체적인 비전 수립과 기업문화 혁신을 위해 노사가 함께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유에이텍

#### ◆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실시



대유에이텍은 지난 16일 광산구 소촌동 광주 공장에서 계묘년 새해맞이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 헌혈 캠페인을 전개했다.

대유에이텍 관계자는 “매년 임직원들이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혈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디에이치글로벌

#### ◆ 자회사 대성엘텍, ‘DH오토웨어’ 로 사명 변경 새출발



디에이치글로벌(회장 이정권)이 인수해 책임 경영하고 있는 자동차 전장회사 (주)대성엘텍이 ‘주식회사 디에이치오토웨어(DH오토웨어)’로 사명을 변경하고 재도약을 다짐했다.

지난 17일 DH글로벌에 따르면, 자회사인 (주)대성엘텍이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디에이치오토웨어(DH오토웨어)’로 사명 변경을 의결했으며, 사명 변경은 DH그룹사로서 이미지를 통일하고, 계열 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성엘텍의 새로운 사명인 DH오토웨어는 자동차(Automobil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합성해 탄생했다. 컴퓨터를 통제하거나 명령을 내려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Software)는 신체에 비유하면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기반한 오토웨어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기술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혁신해 IVI(In-Vehicle Infotainment·인포테인먼트)플랫폼을 구축하고 글로벌 톱티어(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덧붙여 DH그룹의 지향점인 ‘디퍼런스(DIFFERENCE·차별화)’와 ‘하모니(HARMONY·융화&협동)’를 사명에 부여함으로써 계열기업 이미지를 분명히 하고, 그룹 전체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이정권 회장은 “지난해 8월 인수한 DH오토웨어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경영진에 이어 사명 변경까지, 변화와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며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파트너사라는 위상에 걸맞게 책임 경영하고, 전략적으로 투자해 2025년 매출 1조 원, 영업이익 5%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산학협동연구원

◆ ‘창립 20주년 기념식’ 성료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이사장 김보곤 · 원장 차용훈)은 지난 18일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제237회 산학협동포럼을 광주은행 본점 상생마루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20주년 기념식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정만 국회의원, 민영돈 조선대 총장, 박상철 호남대 총장, 김동진 광주대 총장, 서범석 남부대 총장, 조종래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회장, 김종부 대구산학연 이사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염홍섭 · 최상준 · 박옥식 회장(한국산학협동연구원 전 이사장), 김보곤 이사장, 박성수 · 오성동 · 정용기 전 원장을 비롯한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산학협동포럼에서 강기정 시장은 ‘내일이 빛나는 기회의 도시 광주를 향해’란 주제 특강을 통해 무등산 정상 개방과 복합쇼핑몰 유치 등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했다.

차용훈 원장은 “20년 전 200여명으로 시작한 키우리가 이제는 2천3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데다 끊임없는 발전으로 지역경제의 든든한 단체로 자리매김 했다”며 “앞으로도 산학협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정 열 총무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 광주테크노파크



시론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 기정학 시대의 지역협력 글로벌 연결

기술패권 경쟁은 경쟁과 전쟁이라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의 기회를 약화시키고 있다. 인간중심의 포용적 기술 중심 세계는 아직 멀기만 하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한다. 우리 는 경쟁 갈등 중심의 기술시대가 아닌 연결과 협력의 기술중심 시대를 열어야 한다. 시장은 반드시 경쟁이 있고 경쟁은 혁신을 촉진하는 기능도 있지만 시장을 좁게 보지 않고 넓게 보면 경쟁보다는 협력이 필요하고 연결된 융합기술은 더 큰 경쟁력을 가져온다.

패권중심 질서는 파괴와 양극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연결협력의 질서는 상생통합을 가져올 수 있다. 기술이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이롭고 인간답게 기여하는 포용적 연결협력 기술혁신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민선 8기 광주시는 전남도와 반도체특화단지 등 공동협력을 하고 있고, 대구시와 반도체 고속철 등 지역동맹을 하고 있다.

이런 상생협력이 더 넓어지고 더 긴밀해져야 한다. 필자는 그 중 경기도와 광주시 간 기술 문화 등 전

방위협력을 제안한다.

경기도 동탄 판교 화성 용인 등 첨단산업 신도시들은 광주송정역에서 KTX로 1시간30분 영향권들이다. 광주·전남이 앞장서거나 거점이 된 광기술 인공지능 에너지 문화컨텐츠 의료 스마트농수산 기술 등과 경기권 첨단산업간 협력은 지리적 기술적으로 멀지 않다. 만일 양 지자체와 기업 대학 테크노파크와 연구기관들간에 협업 채널이 만들어지고 상호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 균형과 발전 두 성과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기도는 인구집중 등의 문제를 균형적 차원에서 완화하고 기술협력을 통해 경기권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광주시도 청년인구유출을 막고 투자와 기업유치, 기업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 경쟁기관 벤처기업 경영 기술 인력이 광주에 오고, 광주인력도 경기신도시에서 일하다 퇴근도 할 수 있는데 월급 절반을 주택비에 털어 놓고 살기도 파퓰러한 곳에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대신 청년들이 즐겁게 일하는 인프라는 광주에서 만들어 줘야겠다.

경기도가 도와 안양시에 광주가 본부인 한국광기술원의 경기광융합기술센터를 만들어 확장현실(XR) 산업육성에 맞손을 잡은 것은 좋은 사례다.

바로 이런 것이 포용적 기술중심 상생협력이다. 작게는 광주와 전남의 협력 사업이 활발해야 한다. 말로만 그치는 협력이 너무 많다. 영남·충청·제주·강원권 등과의 광역협력사업도 서로의 특화된 기술을 결합해 추진할만한 사업이 많다. 좁은 시야로 국비나 서로 파려는 지역 경쟁 사고로는 공멸이다. 지역 기술기업을 키우는 전국테크노파크도 이제 그런 지역간 협력 사업을 크게 확장해 나가려 한다.

넓게는 세계를 향한 기술과 상품의 연결과 협력이 이뤄지도록 글로벌 인센티브를 강화시켜야 한다. 광주시의 이번 CES참가와 실리콘밸리 진출도 그런 통찰력을 준 것이 다.

과학기술은 이미 초연결시대다. 동의만 하면 무한한 네트워크의 협력이 가능하다. 이제 우리도 기정학 시대의 사고와 행동,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II. 광주경충 소식

### 〈제1588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강기정(광주광역시장)    주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23년 시정운영 방향**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1월20일 광주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2023 시정 방향>이란 주제로 17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588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민선8기 광주시정으로 제시했던 5+1현안으로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자산 I.C진출로 개통여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 복합쇼핑몰 유치의 현안사업은 어느정도 가시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1사업은 군공항 이전인데 대구와 연계한 특별법이 최종 합의되면 진행이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잘못된 설계들의 기본계획 변경과 사업비 추가등을 시민들에게 잘 설명했어야 하는데 조금은 미흡했던 것 같고, 3단계 구간에 대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 노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미국 'CES 2023'을 다녀오면서 데이터와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광주에 희망이 있다는 걸 느꼈다. 미래는 AI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시스템인데 다행히 광주가 먼저 선점하고 있다. 그에 따른 AI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을 위해 AI 영재고를 설립하고 미래 모빌리티 지도를 그려 미래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듯이 든든한 경제전략을 위한 광주가 마중물이 되겠다. 소득은 늘려주고 지출은 줄이고, 가계와 기업은 더하기로 가자며 민생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확대, 청년창업특례보증,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 빚고을론. 미소금융 대출이자 전액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전략을 세웠다.

창업펀드 조성, 광주역 창업밸리조성, 창업페스티벌, 삼성 C-Lab아웃사이드 광주 등 창업생태계를 키우겠다. 또한 뿌리산업 등 기존산업에 미래 신산업을 접목한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와 같은 올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이 체감하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강조했다.



### 사무국 일지(1.16 ~ 1.20)

1.18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시 제1차 민생경제대책본부 회의</li> <li>●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위탁기관 담당자 교육</li> </ul>	1.20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88회 금요조찬포럼</li> <li>● 2023 감사회</li> </ul>
1.19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도 고선패사업 운영 간담회</li> <li>● 지역형 플러스 사업 관계자 회의</li> </ul>		

## 1. 노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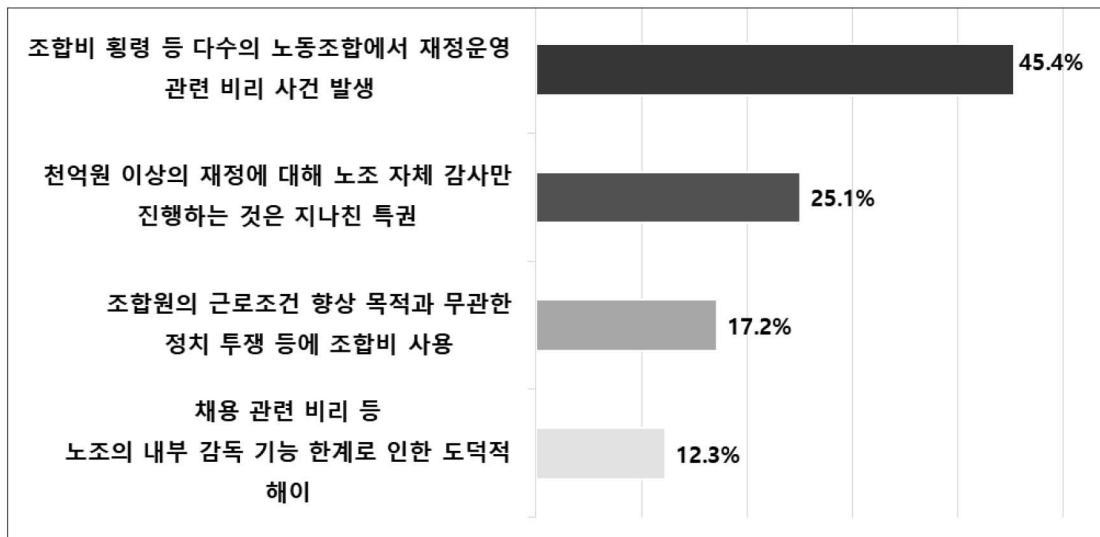
### ■ 경총은 「노조 재정 및 회계 운영 관련 국민 인식조사」결과 발표(1. 13)

○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5%가 “노동조합의 재정 및 회계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

※ 경총은 1. 2~1. 6 전국 성인 51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 실시

- 노조 재정 및 회계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조합비 횡령 등 다수 노조에서의 재정 운영 관련 비리사건 발생이라는 응답이 45.4%로 가장 많았음.
- 그 밖에 “천억원 이상의 노조 재정에 대한 자체 감사는 지나친 특권(25.1%)”,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한 정치 투쟁 등에 조합비 사용(17.2%)” 순으로 조사됨.

#### [참고] 노조 재정 및 회계 투명성 필요 이유



○ 또한 응답자의 31.2%는 노조 재정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노동조합 회계 부정 또는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선택

- 그 밖의 방안으로는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공시 시스템 운영(28.2%)’, ‘노동 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외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제한(24.8%)’ 순으로 조사됨.

### Ⅲ. 노동경제동향

- 경총은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과 같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해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

#### ■ 고용부는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과 「장기분쟁해결 지원단 출범」을 발표

- 고용부는 1. 17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법과 원칙 확립, ▲취약한 노사 보호 및 지원 강화, ▲근로감독 제도 내실화 및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

#### [참고] 고용부 2023년 근로감독 추진 방향

주요 과제	주요 내용
법과 원칙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대 불법·부조리*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대 불법·부조리 : ① 포괄임금 오남용, ② 임금체불, ③ 부당노동행위, ④ 직장내괴롭힘, ⑤ 불공정채용</li> </ul> </li> <li>■ 엄정한 특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의·상습 체불, 직장내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li> <li>- 특별감독 후 유사·동종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후속 기획 감독 실시</li> </ul> </li> </ul>
취약한 노사 보호 및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여성·외국인 등 취약 계층별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계층별 맞춤형 예방감독」 실시</li> <li>* 청년-최저임금, 여성-모성보호, 외국인-균등처우 등</li> <li>-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 정기감독 신설</li> </ul> </li> <li>■ 영세 사업장 노동법 준수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10인 미만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지원 및 분기별로 테마, 취약분야를 정해서 교육·홍보 등 진행</li> <li>* 4대 기초노동질서 : ① 임금체불 예방, ② 최저임금 준수, ③ 임금명세서 교부, ④ 서면근로계약 체결</li> </ul> </li> <li>- (30인 미만 근로시간 등 법 준수 지원)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노무관리지도 집중</li> </ul>
근로감독 제도 내실화 및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협업 강화]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합동 간담회 및 설명회 등 실시</li> <li>- [디지털 노동행정 포털 서비스 개시]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신고사건의 처리과정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 시행</li> </ul>



### Ⅲ. 노동경제동향

- 또한, 고용부는 1. 17 장기 분쟁 사업장의 조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기분쟁해결 지원단」 출범
  - 고용부 지방관서는 노사관계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노사 모두 지원에 동의하는 경우 감독관·전문가\*\*를 매칭해 해당 사업장의 분쟁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
    - \* 선정 대상 : 노사 모두 분쟁 해결 의지가 있으나, 이견이 커 노동위 조정, 지방관서 지원 등 가용 수단을 모두 활용해도 분쟁 해결이 어려운 사업장
    - \*\* 전문가 인력풀 : 각 지방관서별로 경력·역량, 지역 내 노사단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
-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노사 법치를 확립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 2. 법제 동향

### ■ 김선교 의원(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2)

- (발의 이유) 현행법(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9조의2)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2회 분할 가능)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기간이 짧고 분할 횟수도 제한적이라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  
②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  
③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증가

### ■ 하태경 의원(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2)

- (발의 이유)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특정 노동조합의 가입·탈퇴를 강요하거나 조합원의 탈퇴를 저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①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가 근로자와 단위노동조합의 탈퇴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  
② 탈퇴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부과

### ■ 고영인 의원(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3)

- (발의 이유) 현행법(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9조)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비중을 더 높이기 위해 신청제가 아닌 의무제로 변경할 필요성 제기

### Ⅲ. 노동경제동향

- (주요 내용) 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  
②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1년) 중 3개월의 기간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

#### ■ 고영인 의원(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3)

- (발의 이유) 현행법(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등을 받는 경우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비중을 더 높이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 제기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고용보험법 제19조)

- (주요 내용) ① 출산휴가 급여 등의 지급 기간을 기존 '첫 5일' 에서 '첫 15일' 로 연장  
② 출산휴가 급여 등의 지원 대상을 기존 '우선지원 대상기업' 에서 '대기업(상생협력법 제2조)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 으로 변경

#### ■ 류호정 의원(정),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3)

- (발의 이유) 현행법(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상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사유에 대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구제신청·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변호사 자문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지출한 변호사 자문료 등의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케하는 조항 신설

#### ■ 김영진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3)

- (발의 이유) 현행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3)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사후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에 그쳐 괴롭힘 발생

### Ⅲ. 노동경제동향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하도록 권한 부여

#### ■ 양경숙 의원(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6)

- (발의 이유) 현행법(노동조합법 제82조)상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더라도 변호사 보수 등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한 변호사 보수 등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 ■ 양경숙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6)

- (발의 이유) 현행법(근로기준법 제28조)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더라도 변호사 보수 등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변호사 보수 등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 ■ 소병훈 의원(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6)

- (발의 이유) 현행법(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은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피해근로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성희롱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제기

### Ⅲ. 노동경제동향

- (주요 내용)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

#### ■ 홍석준 의원(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7)

- (발의 이유) 현행법(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은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가업을 승계한 자가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고 있어 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가업 승계자가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

#### ■ 홍석준 의원(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7)

- (발의 이유) ① 현행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71조)은 가업상속공제 시 상속세 납부의 연부연납을 20년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가업의 승계를 위한 주식 등의 증여 시에는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않아 증여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 제기  
② 가업 승계자가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상속세를 다시 부과하고 있어 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①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의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용  
② 가업 승계자가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